"중증장애인 자립 돕는다"…전남도, 맞춤형 공공일자리 마련

도, 346억원 투입 3736개 장애인 일자리 제공…전년비 341개↑

장애인·중증장애인·최중증장애인 등 장애 유형·특성 맞춰 지원

전남도가 예산 346억원을 투입해 4000개에 가까운 중증장애인 공공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공공일자리 제공으로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소득 창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19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 지난해보다 341개 늘어난 3736개의 장애인 공공일자리를 제공한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취업 취약계층인 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맞춤형 일자리는 '장애인 일자리'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 일자리',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등 3가지다.

장애인 일자리와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국비 지원되는 반면, 전남형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는 전액 지방비로 지원된다.

장애인 일자리는 전일제, 시간제, 복지형, 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발달장애인요양보호사 보조 일자리 등 5가지로 도내 65개 기관을 통해 2713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일자리 업무 분야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내 장애인복지 업무 보조, 복지시설과 특수학교 환경정비 및 급식 도우미, 장애인 주차구역 계도, 경로당과 복지관 내 안마 서비스 제공, 요양원 입소자 식사 및 이동 지원 등이다.

전남도는 2022년부터 최중증 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도 제공하고 있는데, 올해 120명에게 일자리를 지원하고 있다.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참여 대상은 노동시장이나 일반적인 장애인일자리, 직업재활시설 작업장 등에서 일할 수 없는 중증장애인이다. 도는 이들에게 캠페인·편의시설 모니터링 등 권익옹호, 미술·음악·연극 등 문화체험, 강의·공연 등 인식개선 등의 일자리를 제공한다.

전남도는 최중증장애인 일자리 참여자의 활동을 지원하는 전담 인력도 배치하고 있다. 전담 인력은 참여자 5명당 1명으로, 타 자지단체보다 월등이 많은 숫자라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중증장애인 동료상담은 장애가 있는 동료상담가 43명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상담, 자조모임, 사례관리 등을 통해 자립 역량을 강화하는 사업이다. 15개 제공기관에 860명이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일자리 참여 대상은 전남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미취업 등록 장애인이다. 신청은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사업 수행기관에 하면 된다.

전남도 관계자는 "올 10월 예정인 '제2회 장애인 일자리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해 공공 일자리뿐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장애인 일자리 발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제2회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 18일 여수 흥국체육관에서 열린 '2025년 제2회 전남 여성 일자리 박람회'에서 주요내빈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지사 "책임행정·현장 밀착대응" 강조

시·군 부단체장 장마철 강도 높은 재난대응 주문

김영록〈사진〉 전남도지사가 20일부터 장마가 예상됨에 따라 강도 높은 재난대응체계 구축과 주민 밀착형 대응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18일 관련 부서에 특별지시를 내려 시·군 부단체장 중심의 '선(先)조치 후(後)보고' 상황관리를 주문했다.

또 각 기관별 실시간 정보공유와 신속한 현장 대응, 대형 인명피해 우려 지역 수시점검 관리를 지시했다.

이밖에도 재난안전 취약계층 1대 1 전담 공무원 관리제 운영 및 주민 대피 원칙 정립, 경찰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등도 당부했다.

김 지사는 올해 첫 운영에 들어가는 '전남형 마을안전지킴이'를 통한 현장 밀착 대응 강화를 주문했다. 마을안전지킴이는 동네 사정을 잘 아는 이·통장, 자율방재단 등 4000여 명이 재해 위험지역을 직접 예찰하고, 주민의 신속한 대피를 돕는다.

김영록 지사는 "인명피해 제로를 목표로 민관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모든 상황에 대비한 과감하고 선제적인 현장 대응에 나서야 한다"며 "기상예측을 뛰어넘는 돌발성 극한호우가 잦아지는 만큼,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두고 과하다 싶을 정도로 철저히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도는 기상 상황에 따라 재해 위험지역을 선별, 재난안전문자와 마을방송 등으로 맞춤형으로 재난안내를 제공할 방침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지방정가 라운지

'비실명 공익제보' 조례 개정안 본회의 통과

김재철 전남도의원 대표 발의

전남도교육청 공직자의 비위행위를 무기명으로 공익 제보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전남도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 391회 본회의에서 김재철(민주·보성1)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남도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원안 의결했다.

개정된 조례안은 공익 제보자가 인적사항을 밝히지 않고도 교육감이 위촉한 변호사에게 공익제보를 대리할 수 있게 하는 '비실명 대리 공익제보' 도입을 담고있다. 공익제보는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등도 교육청 공직자의 부패행위와 공익 침해 행위 등을 교육감에게 제보하는 것으로 그동안 제보자의 신원을 밝혀야만 가능했다.

전남도교육청은 지난 2월 도의회 교육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공익제보 관련 조례가 제정된 2021년 이후 접수된 공익제보가 단 한건도 없다고 밝혔는데, 이번 조례 개정으로 공익제보 활성화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재철 의원은 "전남도교육청이 2024년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종합청렴도 3등급으로 평가된 반면, 공익제보는 미흡한 수준"이라며 "조례 개정이 공익제보를 활성화하고 청렴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민석 기자 mskim@

광주시, '골목경제 상황실' 가동…소상공인 살리기 총력

점심식사 골목식당 가기·전통시장 이용 확대 등

광주시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골목상권 주변 도로의 야간 주차를 허용하는 등의 방안을 내놨다.

고금리, 고물가에 어려워진 지역 소상공인에게 각종 지원을 제공해 골목경제를 살린다는 것이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날 기획조정실에 지역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를 위한 현장밀착형 정책 추진의 구심점인 '골목경제 상황실'을 설치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광주시와 공공기관이 함께 힘을 합해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모색에 나선 것이다.

점심식사 골목식당 가기, 전통시장 이용 확대, 소상공인 홍보광고 제작 등 그동안 공공기관별 소비 촉진 및 골목경제 활성화 방안을 서로 공유했다.

이날 논의에서는 골목상권 주변도로 야간주차 허용, 시·공공기관과 전통시장·골목 상점가 간 1:1 매칭 지원, 광주공공배달앱 활성화 , 골목상권 전담조직 신설 등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구체 지원 방안이 제시됐다.

광주시는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골목경제 상황회의'를 통해 현장 밀착형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실효성 있고 지속성 있는 정책을 확보 하기 위해 광주시 산하에 골목상권 전담조직 신설 방안도 고려하고 있다.

20일에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간담회를 열고 배달 수수료 절감과 공정한 판로 확보 등 소상공인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지원책 마련에 나선다.

강기정 광주시장은 "많은 지역 소상공인이 매일 고통에 신음하고 있다"며 "온 힘을 다해 골목경제 살리기에 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차영수 "어촌계장 책임 수당 지급 제도화해야"

전남도의회 본회의서 건의안 발의

전남도의회 의원들이 어촌계장의 책임 수당 지급 도입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발의했다.

19일 전남도의회에 따르면 의회는 지난 17일 열린 제 391회 본회의에서 차영수(민주·강진) 의원이 대표 발의한 '바다의 버팀목, 어촌계장 책임수당 도입 촉구 건의안'을 원안 의결했다.

차 의원이 발의한 건의안은 현재 무보수로 봉사하고 있는 어촌계장에게 책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어촌계장이 국내 수산업의 최전선에서 수산자원 관리, 해양환경 보전, 행정협조, 주민 갈등 조정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지방자치법에서 지위를 인정받고 있는 이·통장과는 달리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게 도의회 지적이다.

차 의원은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례를 통해 어촌계장에게 활동비를 지급하려는 시도가 있었지만, 돌아온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제처의 해석뿐이었다"며 "정부는 어촌계장의 공공적 역할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고, 법률에 책임수당 지급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의회는 해당 건의안을 대통령실과 국회의장, 국무총리실, 해양수산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